

국민 가치관이 정부 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Grid Group 문화이론의 적용을 중심으로*

이윤경**

본 연구는 정부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국민 가치관을 설정하고, 국민 가치관에 따라 정부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실증 분석하여 정부의 정부 공정성 개선 정책에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공정성에 대해 이론적으로 논의하고, 국민 가치관을 Douglas & Wildavsky의 Grid Group 문화이론에 따라 분류하여 연구 분석틀을 도출하였다. 설정된 연구 분석틀에 따라 2013년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행정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 자료를 사용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의 분배 공정성에 대해서는 개인주의 가치관이 긍정적인 영향을, 평등주의와 체념주의 가치관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의 절차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는 계층주의 및 개인주의 가치관이 긍정적인 영향을, 평등주의 가치관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증분석 결과에 따라 정부는 국민 가치관의 차이를 고려한 정책을 통해 정부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현재 정부 차원에서 공정성을 강조하는 하향식(top-down) 관점에서 탈피하여, 국민이 정부의 공정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상향식(bottom-up) 관점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국민 가치관, 정부 공정성, Grid Group 문화이론

* 본 논문의 질적 개선을 위해 도움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연세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공공관리, 조직행태, 정부정책 등이다(yoonklee@yonsei.ac.kr).

I. 서론

최근 ‘공정사회’란 용어가 한국의 정치적·사회적 화두로 급부상하면서 정부 정책 전면에서 핵심 사안이 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8.15 기념 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를 언급하며 집권 후반기 국정지표로 제시한 이후, 현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 기초를 이어받아 ‘공정사회’를 강조하며 경제민주화 국정전략에서 공정경쟁을, 사회통합 국정전략에서 공직임용의 기회균등과 공평한 대우를, 그리고 국정기조 추진기반으로 깨끗·유능한 정부를 제시하며 각종 부문에서 공정성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 정상들이 2014년 국가운영계획이 포함된 신년사를 발표하는데 있어서도 공정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정사회의 문제가 각 국가별로 배경과 형태는 달라도 세계 공통의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영국에서는 사회 전반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0년 12월에 ‘공정한 영국 건설(Building a Fairer Britain)’을 슬로건으로 하는 보고서가 제출되기도 하였으며, 중국의 경우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4년 신년사를 통해 내부부패의 척결을 통한 공정사회 건설을 천명하기도 했다(매일경제, 2014). 이와 같이 국가 지도자에 의해 정부의 공정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사회 각 분야가 불공정하다는 전제가 깔려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최근 정부 정책에 있어 공정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정부 공정성을 다룬 연구가 부족하고, 특히 정책의 대상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공정성을 분석한 연구가 미흡하다고 지적되기도 하였다(김은희·박희서, 2007). 이에 본 연구는 정부 차원에서의 공정성 강조라는 하향식(top-down) 관점에서 벗어나, 국민이 정부의 공정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상향식(bottom-up) 관점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공정성 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인식 과정에 있어 가치관과 같은 문화적 배경이 공정성 정도를 인식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Leventhal, 1976; Leung & Bond, 1984; Fisek, Norman, & Wagner, 1986; Leung & Lind, 1986; Field, Pang, & Chiu, 2000; 서인석·윤우제·권기현, 2011). 그러나

문화의 유형을 이론적으로 분류하여 공정성과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려는 시도(서인석·윤우제·권기현, 2011)를 찾아보기는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Douglas & Wildavsky의 Grid Group 문화이론을 연구에 적용한다.

즉, 본 연구는 국민의 가치관이 정부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국민의 가치관 차이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민 가치관의 차이가 정부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어떤 차이를 유발하는가?”라는 연구질문을 제시하고, Douglas & Wildavsky의 Grid Group 문화이론에 따라 국민의 가치관을 분류한 후, 각 가치관 별로 정부 공정성의 인식에 있어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그 영향력 정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1. 정부 공정성

공정성은 여러 분야의 학자들에게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그에 따라 관련 연구가 상당히 이루어져 왔다. 그동안 발전되어온 공정성 연구는 크게 사회 전반적 접근과 조직 심리적 접근, 그리고 결과 지향적 접근과 과정 지향적 접근으로 구분된다. 사회 전반적 접근은 사회 정의 차원에서의 접근으로서 법이나 제도와 같은 사회 구조에 초점을 두는 반면, 조직 심리적 접근은 공정성 차원에서의 접근으로서 개인 차원의 심리에 초점을 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정성은 결과 지향적 또는 과정 지향적 접근인가에 따라 분배 공정성과 절차 공정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존의 공정성 연구들의 접근법을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공정성 연구 접근법

	사회 전반적 접근	조직 심리적 접근
결과 지향적 접근	사회 정의	분배 공정성
과정 지향적 접근		절차 공정성

출처: 조국행(2007: 22) 재인용 및 재구성.

1) 사회 전반적 접근에서의 공정성

우선 사회 전반적 접근에서 바라보는 공정성 개념은 보다 정확히는 보편적인 규칙 또는 제도에 따른 불평등의 정도로 볼 수 있다. 이 불평등 문제는 다시 두 가지 시각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첫째는 평등하게 태어난 인간이 불평등하게 대우 받는 것을 불평등이라고 보는 시각이며, 둘째는 합당한 차이에 따른 대우의 차별은 공정하지만 합당한 차이가 없는데 차별대우를 하는 것은 불평등하다고 보는 시각이다(석현호, 1997).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 학자들에 의해 이론적 논의가 진행되어 왔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Bentham의 공리주의와 Rawls의 공정성 이론이 대표적이다. 이 두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Bentham(1789)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를 통해 그 사회 전체의 복지와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라고 보았다(Bentham, 1789, Ewing, 1948; Mill, 2001). 공리주의 사회에서의 공정성은 행위자의 행위에 의해 결정되는데, 그 행위자의 행위가 사회 전체의 복지와 행복을 증진시킬 때 공정한 것이라 할 수 있고, 행위자의 행위가 그렇지 못하면 공정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천대운, 2011). Mill(2001)에 따르면 공정사회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삶을 유지하고 복지를 극대화하는 사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공리주의적 관점에서의 공정성 논의는 사회 전체의 최대 행복만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개인의 고통이나 희생을 고려하지 않고 무시한다는 한계가 있다. 즉, 공리주의에 따라 정부의 어떤 정책이 사회 전체의 행복을 극대화하고자 한다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그 정책은 정당화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이다.

둘째, Rawls(1971)는 앞서 제기된 공정성에 대한 공리주의의 관점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공정성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를 제시하였다. 다양한 이해관계로 구성된 국가에서 불평등이 시정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고려되는 것이 바로 공정한 사회라 할 수 있다(Rawls, 1971). Rawls(1971)는 ‘공정성으로서의 정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1원칙인 동등한 자유와 권리의 원칙과 제2원칙인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즉, 정부는 개인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혜택을 부여하여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천대운(2011)은 Rawls의 공정성 사상을 바탕으로 공정사회에 도달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살펴보고 어떤 정책이 수립 및 집행되어야 할지 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는데, 그 결과 법률과 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구축되어야 하며 특히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았다. 또한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Rawls의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훈련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공정한 조건과 상황 하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종수(2011)는 공정성으로 기회의 형평성을 제시하는 자유주의와 분배적 형평성을 제시하는 공동체주의, 그리고 공정한 규칙을 제시하는 공공선택론의 이론적 시각에서 공정성 개념을 해석하였다. 연구 결과, 지역사회 내에서 공정성을 위해서는 투명성과 법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여기에 여가와 교육기회의 공정성, 공동체 회복, 주민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지방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용덕(2011)은 어떤 정책이 정의롭고 공정한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정책이론에서 공정성 문제가 어떻게 접근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공정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모색하여 이를 이론화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공정성 등의 규범적 가치 기준에 대한 논제의 제시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 전반적 관점에서 정부 공정성을 살펴본 학자들은 법률과 같은 보편적인 규칙과 제도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조직 심리적 접근에서의 공정성

조직 심리적 접근은 정해진 규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와 그 규칙의 적용 과정에 대한 개인의 인식 및 반응에 초점을 맞추며, 개인의 주관적 해석에 따라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반응이 나타난다는 입장이다. Homans(1961)는 교환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의 투자와 이익의 차이를 비교하여 자신의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때 공정성을 느끼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분배 공정성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이후 Adams(1965)가 Homans의 분배적 정의 외에도 Stouffer의 상대적 박탈감, Festinger의 사회비교와 인지부조화 등의 기존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공정성 이론을 체계화하면서(조국행, 2007: 재인용), 본격적으로 다양한 조직 심리학자들에 의해 조직적 맥락에서 공정성 연구가 진행되었다.

Adams(1965)는 교환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의 투자 대 산출 비율 차로 공정성을 개념화하였는데, 기본적으로 인간이 공정하게 대우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공정성(fairness, equity)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공정하게 대우를 받고 있다는 믿음에 기인하는 반면, 불공정성(unfairness, inequity)이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불공정하게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인식에 기인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투입에 부합되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보상이 무엇인가에 관한 신념을 형성하고, 자신의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을 타인의 경우와 비교한다. 이러한 비교 후 자신에 대한 처우가 불공정하다고 느끼게 되면 이에 따른 심리적 불균형·긴장·불안감 등을 해소시키려 노력하지만, 계속하여 불공정성을 느끼게 되면 자신의 투입 또는 산출을 변경하거나 인지적으로 왜곡할 수 있으며, 타인의 투입이나 산출에 영향을 미치려는 노력을 기울이며, 자신의 준거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김호섭 외, 2007). 분배 공정성 개념만으로 공정성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나타나면서 절차 공정성 개념이 추가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 절차 공정성은 산출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절차와 규칙에 초점을 둔 것이다. Lind & Tyler(1988)의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결정 결과에 따른 분배 공정성 인식에서 보다 그 절차와 과정을 중시하는 절차 공정성 인식을 더 중시한다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또한 Lock & Henne(1986)와 Furby(1986)는 분배 공정성보다 절차

공정성이 더 영향력이 있으므로 절차 공정성에 중점을 두고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Hegvedt(1993)는 분배 공정성이 절차 공정성에 우선해 더 관심을 받아왔으므로 분배 공정성에 더 중점을 두어 연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공정성을 다룬 기존 연구들의 대부분은 분배 공정성과 절차 공정성으로 분리해 존속되어 왔지만, 각 공정성의 중요성에 대한 견해는 엇갈리고 있다.

지금까지의 공정성 이론을 정리하면, 분배 공정성(distributive fairness)이 투입 노력과 산출 결과물의 비율을 통해 공정성을 지각하는 것으로 보는 한편, 절차 공정성(procedural fairness)은 보상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 그 수단이나 절차에서의 공정성을 지각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많은 조직 학자들이 공정성을 분배 공정성과 절차 공정성으로 구분하여 연구해왔다. Cho & Sai(2013)는 조직 공정성을 분배 공정성과 절차 공정성, 정보 공정성으로 구분하여, 이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경력개발기대와 직원만족과 조직적 차원에서 고위 지도자에 대한 충성과 협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세 차원의 조직 공정성이 조직적 차원의 결과에는 거의 영향력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개인적 차원에서 조직 구성원의 태도와는 관련 된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윤정구·임준철(1998)은 조직 공정성의 변수인 분배 공정성과 절차 공정성, 직무 공정성이 조직 효과성 변수인 직무만족, 조직몰입, 그리고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으며, 특히 사기업과 공기업에서의 영향력 정도 차이를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공기업보다 사기업에서 직무 공정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력과 절차 공정성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황용·이희선(2013)은 공무원의 조직 공정성과 조직몰입, 그리고 혁신적 업무행동 간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는데, 그 결과 분배 공정성과 상호작용 공정성이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절차 공정성과 조직몰입이 혁신적 업무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김호균·김정인(2013)은 미국 NPO 조직에서의 분배 공정성 및 절차 공정성과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 간의 관계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그 결과 분배 공정성이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편, 절차 공정성은 시민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많은 학자들은 분배 공정성과 절차 공정성이 조직 행태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연구해왔다. 그 결과, 이들 공정성이 경험적으로 조직몰입, 관리와 상사에 대한 신뢰, 권위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같은 조직 구성원의 태도와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누적되어 왔으며, 급여나 성과 평가, 그리고 승진과 같은 결과에 대한 만족에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Schaubroeck, May, & Brown, 1994; Cohen-Charash & Spector, 2001; Rubin, 2009; Cho & Sai, 2013).

3) 정부 공정성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정부 공정성은 사회 전반의 다양한 사람들인 국민이 정부 활동에 대해 공정한 것으로 인지하는 결과(Hegvedt, 1993)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부의 공정성이 국민 개인의 주관적 인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공정성 이론 중에서 정부의 공정성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조직 심리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공정성 이론에 따라 정부 공정성을 정의하면, 첫째, 정부로부터 받는 대우를 국민이 준거집단과 비교해 공정성 여부를 인식한다는 시각으로 분배 공정성을, 둘째,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단과 절차에서의 공정성 여부를 인식한다는 시각으로 절차 공정성을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박종민·배정현(2007)은 정책결과 지향적 접근으로서 분배 공정성을 살펴보았으며, 정책과정 지향적 접근으로는 절차 공정성을 살펴보았다.

정부 공정성을 다룬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종민·배정현(2011)은 정부 대우의 공정성인 분배 공정성과 정책과정의 절차 공정성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석현호(1997)는 정부활동의 공정성과 관련해 정책사항별 중요성, 정책사항별 정부활동 만족도,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인식, 정부로부터 받는 대우에 대한 인식, 정부로부터 불공정 대우를 받았을 때의 대응행동, 정책결정 이후 정부조치에 대한 인식, 그리고 정부와 국가와의 유대감을 살펴보았다. 석현호 외(2005)는 분배 공정성을 국민들 입장에서

정부로부터 받는 대우에 대한 인식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이를 다른 지역 주민, 상위계층, 하위계층, 다른 성의 준거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측정하였다. 또한 절차 공정성을 국민이 정부 정책결정과정에서 느끼는 공정성 정도라 정의하고, 이를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의견반영, 관련 정보수집, 편견과 감정 배제, 외부압력 극복, 특정집단 고려 지양, 반대의견 제시 허용, 소외계층 배려의 기준으로 측정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조직 수준에서의 공정성 연구에 비해 정부 수준에서의 공정성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김은희·박희서(2007)는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공정성을 다룬 연구가 부족하며, 특히 정부 서비스 및 정책의 대상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공정성을 분석한 연구가 전무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박종민·배정현(2011)의 연구를 제외한 기타 연구들은 국민의 정부 공정성 인식에 대한 현황 파악에 치중할 뿐, 인과관계 분석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 공정성을 정부로부터 받는 대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인 분배 공정성과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국민의 인식인 절차 공정성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4) 가치관(문화)과 공정성의 관계

공정성에 대한 인식 및 지각은 개인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공통의 문화에 따라 그 정도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한 학자들은 가치관(문화)과 공정성 간의 관계를 연구해왔다(Fiske, Norman, & Wagner, 1986; Leventhal, 1976; Leung & Bond, 1984; Leung & Lind, 1986; Field, Pang, & Chiu, 2000; 서인석·윤우제·권기현, 2011). 이들 연구에서 밝혀진 가치관 및 문화와 공정성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Fiske, Norman, & Wagner(1986)는 공정성이 개인들 간의 국지적인 인식에 따라 인지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준에 의해서도 인지될 수 있다고 보고 준거 구조(reference structure)의 개념을 도입했다. 즉, 그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에

서 사람들이 규범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식이 공정성 비교의 준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또한 Leventhal(1976)은 사람들이 사전적으로 상이한 정의 규범(justice norm)을 채택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Leung & Bond(1984)는 공정성에 대한 선호가 국가나 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Leung & Lind(1986)는 Hofstede(1980)의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이론 유형에 따라 선호하는 절차가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를 밝혔는데, 예를 들어 갈등 과정에서 집단주의적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동양에서는 양보하는 조정절차를 선호하는 반면, 개인주의적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서양에서는 중재재판 절차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여러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고, 그에 따라 일반적으로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분배 공정성보다는 절차 공정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Field, Pang, & Chiu, 2000).

한편, 서인석·윤우제·권기현(2011)은 본 연구의 구조와 유사하게 정부조직의 조직문화와 조직 공정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상이한 조직문화가 조직 공정성의 정도를 다르게 형성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시각을 확장하면 개인의 문화적 차이가 공정성을 지각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공정성과 같은 심리적 차원의 개념은 문화 내에서 배태되기 때문에 공정성에 대한 연구에 있어 문화적 요인을 영향 요인으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서인석·윤우제·권기현, 2011).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를 통해 개인의 주관적 인식의 기저에 문화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공정성을 인식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Hofstede의 문화이론을 적용한 Leung & Lind(1986)의 연구와 조직적 차원에서 Quinn의 경쟁가치모형에 따라 문화 유형을 분류해 조직 공정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서인석·윤우제·권기현(2011)의 연구 외에 기타 선행연구들에서 문화의 유형을 이론적으로 분류하여 공정성과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려는 시도를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Douglas & Wildavsky의 문화이론과 공정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미흡하다는 인식 하에 본 연구는 국민 개인의 가치관을 이론적 체계에 따라 분류하고 각 문화별로 정부 공정성

을 인식하는데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2. 국민 가치관(문화)

문화는 일반적으로 가치·신념·규범이라는 협의의 개념과, 한 사회의 정신적 산물을 포함한 특정 삶의 양식이라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된다(주재현, 2011).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공통의 사회적 질서를 수용하는데, 이 사회질서는 일종의 공유된 가치체계인 문화라 할 수 있다. 사람의 가치관은 그 사람의 문화적 편견(cultural biases)과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 그리고 삶의 양식(ways of life)에 따라 제약되는데(Douglas & Wildavsky, 1982), 이에 따라 사람마다 서로 다른 행태를 보이기도 한다. 즉, 문화는 특정 사회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약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서인석·윤우제·권기현, 2011).

이러한 문화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시도로 Douglas & Wildavsky(1982)의 Grid Group 문화이론, Triandis(2001)의 문화유형론, 그리고 Quinn(1983)의 경쟁가치모형 등이 있다. 이들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Douglas & Wildavsky(1982)는 문화적 편견과 사회적 관계, 그리고 삶의 양식의 세 가지 개념으로 문화를 정의하고, 격자성(grid)과 집단성(group)이라는 기준으로 문화의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하였다. 둘째, Triandis(2001)는 개인주의(individualism)와 집합주의(collectivism)의 정체성과 수직주의와 수평주의의 권력관계의 두 기준을 적용해 문화의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하였다. 셋째, Quinn(1983)의 경쟁가치모형에서는 사회에서와 같이 다양한 가치가 조직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이를 조직 수준에서 분석하고자 문화유형을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이들 이론적 접근법 중 Quinn의 경쟁가치모형은 분석 수준이 조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이를 적용해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Douglas & Wildavsky의 문화이론과 Triandis의 문화유형론은 수많은 문화적 차이나 편견을 간략하게 분류하고 해석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분석 틀로 활용할 여지가 크다. 그 중 Douglas & Wildavsky의 문화이론은 Quinn의 경쟁가치모형에서 제시되는 문화 유형을 모두 포괄하면서도 체념주의라는 문화 유형을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보편적인 분석틀로서(주재현, 2011: 5) 다양한 선행연구들에서 활용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Douglas & Wildavsky의 문화이론을 활용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Douglas & Wildavsky의 문화이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 문화이론은 격자성과 집단성 유형(Grid Group Typology)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는 사회적 관계를 격자성(grid)과 집단성(group)이라는 두 차원에서 살펴보기 때문이다. 이 두 차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정도에 따라 계층주의, 평등주의, 개인주의, 체념주의로 문화 유형을 분류한 결과를 도식화하면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Douglas & Wildavsky의 Grid Group 문화이론

격자성(Grid)	고(강)	체념주의(Fatalism)	계층주의(Hierarchy)
	저(약)	개인주의(Individualism)	평등주의(Egalitarianism)
		저(약)	고(강)
		집단성(Group)	

우선, Grid Group 문화이론의 두 축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집단성(group)은 사회에서 한 개인의 가회에 귀속 또는 일체되어 있는(incorporated) 정도로서, 그 정도가 강할수록 개인의 선택이 집단의 결정에 의존 및 제약되기 쉽다. 즉, 집단성 차원은 개인의 생활이 집단 구성원에 의해 유지·지탱되고 흡수되는 사회적 합체의 정도를 나타낸다. 둘째, 격자성(grid)은 한 개인이 외부적 환경에서 부과된 규제, 즉 사회적 규범(social prescription)의 강도를 의미하는데, 이에 그물처럼 얽혀 있는

1) Douglas & Wildavsky의 Grid Group 문화이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ouglas & Wildavsky(1982), Thompson, Ellis, & Wildavsky(1990), 박종민·김영철(2001), 주재현(2011) 등을 참조함.

격자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즉, 규범이라는 사회적 규제가 강할수록 개인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협상이나 타협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좁아진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집단성의 강도와 격자성의 강도를 교차시키면 위의 <그림 1>에서와 같이 계층주의와 평등주의, 개인주의, 체념주의의 4가지 문화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계층주의 문화는 강한 집단성과 강한 격자성(규범) 하에서 나타나는 문화 유형으로서, 이러한 사회적 맥락에서 개인의 행동은 집단 내의 다른 구성원, 특히 지배계층의 통제와 사회적으로 부여된 역할에 의해 좌우 또는 구속되기 쉽다. 계층주의 문화의 사회에서는 권위를 제도화하고, 집권화되어 있는 권위를 수용하는 구성원들 간의 분업에 의해 질서가 유지된다. 절차가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며, 각 사람은 각자의 계급이나 위상, 지위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준수한다. 또한 사람들이 다른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과정에서의 불균형이 정당화되는 것이 계층주의 문화의 특징이다. 둘째, 평등주의 문화는 집단성은 강하지만 격자성의 강도는 약한 문화 유형으로서, 이러한 사회에서 구성원들의 정체감과 공동체 의식 수준은 매우 높게 나타나지만, 신분이나 계층의 규정으로 나타날 불평등을 우려해 사회적 역할을 정교하게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집단 구성원 간의 관계는 애매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평등주의 문화에서는 권위를 불평등의 형태로 보고 이를 거부한다. 셋째, 개인주의 문화는 집단성과 격자성 모두 약하게 나타나는 유형으로서, 개인은 집단 협동이나 규범화된 역할에 의해 구속받지 않는다. 개인주의 문화에서 중요한 사회적 질서는 자기규제(self-regulation)이며, 평등주의 문화에서 중시하는 결과의 동등보다는 기회의 동등을 중시하고, 실패를 제도의 탓으로 보기보다는 개인적인 역량의 부족 때문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특징이다. 넷째, 체념주의 문화는 집단성의 강도는 약하지만 격자성의 강도가 강한 문화 유형으로서, 개인을 구속하는 사회적 규범은 강하지만, 집단 소속감은 떨어지는 사람들이 보이는 체념적인 삶의 형태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인생이 복권 같다는 인식 하에서 세상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체념주의 문화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결정하는 것에 자율성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는데 소극적이고 회의적이다. 이와 같은 서로 다른 문화적 맥락을 가진 사람들은 문화적 편견을 가지면서 대상

에 대한 다른 인식과 태도를 보이게 된다는 것이 Douglas & Wildavsky의 문화이론의 핵심이다.

이러한 Douglas & Wildavsky의 문화이론을 활용해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수행해왔다. 전영평(2001)은 여성 정책 사례에서 여성 문화의 성격을 Douglas의 문화이론의 시각으로 분석하였는데, 여성에 대한 문화적 편견, 여성의 사회적 관계, 여성의 삶의 방식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여성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박종민·김영철(2001)은 Grid Group 문화이론을 통해 한국 행정문화의 특징을 재구성하여 살펴보았으며, 오수길·채종현(2003)은 문화이론을 바탕으로 한국 중앙행정기구의 문화유형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각 행정기관의 문화가 계층주의에 해당되었으며, grid 차원에서 기관별로 차이가 나타났지만 group 차원에서는 기관별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주재현(2011)은 한국 행정문화에 Grid Group 문화이론을 적용해 그 변화양상을 살펴보았는데, 분석 결과 기본적으로 계층제적 문화가 주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인주의 문화와 평등주의 문화가 등장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와 같이 Douglas & Wildavsky의 문화이론은 한국의 문화를 분석하는 다양한 연구들에서 분석 수단으로 활용된 경우가 매우 많으며, 개인들의 사회적 환경을 분석 단위로 삼는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측면이 크다. 이에 본 연구는 Douglas & Wildavsky의 문화이론을 적용해 국민의 가치관을 분류하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3. 정부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개인의 문화적 요인 외에 정부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요인들이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져 왔다. 특히, 사회심리학자들은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문화적 요인 외에도, 사회경제적 조건들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해왔다(Leventhal, 1976; Greenberg, 1990).

경제적 조건에서 보면 자원이 풍족하게 분배될 경우 욕구 규칙과 평등 규칙 중 어느 쪽에도 선호가 크게 치우치지 않는 반면, 자원이 희소하게 분배될 경우에는

욕구 규칙이 평등 규칙보다 더 강하게 선호된다는 것이다(Greenberg, 1987).

이와 관련하여, 백승주·금현섭(2013)은 개인이 인식하는 불평등 정도가 개인의 소득이나 국가의 경제상황과 같은 경제적 조건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측면과 연계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와 유사하게 이승중(2010)도 개인의 사회심리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배경이 정부에 대한 신뢰 및 정책에 대한 만족에 대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개인이 사회 및 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고 정치 및 사회에 대한 참여에 적극적일수록 정책에 대한 인식 및 수용성 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윤상우·김상돈, 2010). 즉 공정성은 사회의 다양한 구조적 구성요소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석현호, 1997).

한편, 개인의 정치적 이념도 정부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존 선행연구들에서도 보수적 이념 성향을 가진 개인은 시장의 역할을 중시하며 상대적으로 정부의 역할은 소극적이어야 한다고 보는 반면에, 진보적 이념 성향을 가진 개인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금현섭·백승주, 2010). 따라서 같은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보수적 이념 성향의 개인은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고, 진보적 이념 성향의 개인은 긍정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개인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정책에 대한 지지 또는 정부 공정성 인식이 달리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엄밀히 얘기하자면, 개인의 정치적 이념은 본 연구에서 살펴보는 개인의 가치관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Douglas & Wildavsky의 문화이론에 따라 국민의 가치관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각 가치관별 정부 공정성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보는 것을 주목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개인의 정치적 이념은 통제변수로 포함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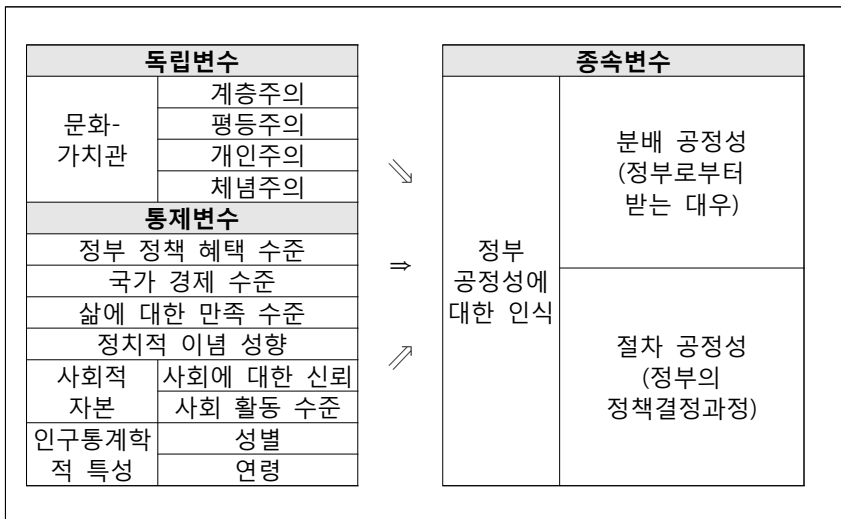
이에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국민 개인의 가치관 외에 정부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국민이 인식하는 정부 정책의 혜택 수준, 국가 경제 수준, 삶에 대한 만족 수준, 국민 개인의 정치적 이념 성향, 그리고 국민의 사회적 자본으로 사회에 대한 신뢰 수준과 사회 활동 수준, 성별 및 연령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추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 분석틀

이상의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국민의 가치관에 따라 정부 공정성 인식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종속변수인 정부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분배 공정성으로서 정부로부터 받는 대우와 절차 공정성으로서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공정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각 정부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국민의 가치관을 Douglas & Wildavsky의 문화이론에 따라 계층주의, 평등주의, 개인주의, 체념주의로 분류하여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한다. 국민 가치관 변수 외에 정부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로 정부 정책으로 받는 혜택의 수준, 국가 경제 수준, 삶에 대한 만족 수준, 정치적 이념 성향, 국민 개인의 사회적 자본으로 사회에 대한 신뢰와 사회 활동 수준을, 그리고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성별과 연령을 살펴본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분석틀을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연구 분석틀



또한 앞서 설정한 변수들을 바탕으로 하여 구체적인 연구 모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text{모형 1: 정부의 분배 공정성} = \alpha + \beta_1 \cdot \text{계층주의} + \beta_2 \cdot \text{평등주의} + \beta_3 \cdot \text{개인주의} + \beta_4 \cdot \text{체념주의} + \varepsilon$$

$$\text{모형 2: 정부의 분배 공정성} = \alpha + \beta_1 \cdot \text{계층주의} + \beta_2 \cdot \text{평등주의} + \beta_3 \cdot \text{개인주의} + \beta_4 \cdot \text{체념주의} + \lambda_1 \cdot \text{정부 정책 혜택 수준} + \lambda_2 \cdot \text{국가 경제 수준} + \lambda_3 \cdot \text{삶에 대한 만족 수준} + \lambda_4 \cdot \text{정치적 이념 성향} + \lambda_5 \cdot \text{사회에 대한 신뢰} + \lambda_6 \cdot \text{사회 활동 수준} + \lambda_7 \cdot \text{성별} + \lambda_8 \cdot \text{연령} + \varepsilon$$

$$\text{모형 3: 정부의 절차 공정성} = \alpha + \beta_1 \cdot \text{계층주의} + \beta_2 \cdot \text{평등주의} + \beta_3 \cdot \text{개인주의} + \beta_4 \cdot \text{체념주의} + \varepsilon$$

$$\text{모형 4: 정부의 절차 공정성} = \alpha + \beta_1 \cdot \text{계층주의} + \beta_2 \cdot \text{평등주의} + \beta_3 \cdot \text{개인주의} + \beta_4 \cdot \text{체념주의} + \lambda_1 \cdot \text{정부 정책 혜택 수준} + \lambda_2 \cdot \text{국가 경제 수준} + \lambda_3 \cdot \text{삶에 대한 만족 수준} + \lambda_4 \cdot \text{정치적 이념 성향} + \lambda_5 \cdot \text{사회에 대한 신뢰} + \lambda_6 \cdot \text{사회 활동 수준} + \lambda_7 \cdot \text{성별} + \lambda_8 \cdot \text{연령} + \varepsilon$$

IV. 자료 구성 및 측정

1. 자료 수집 및 분석표본의 특성

본 연구는 분석을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에서 2013년에 수행된 ‘행정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행정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는 1992년부터 한국행정연구원이 3년마다 국민을 대상으로 수행해온 조사이다. 2013년 ‘행정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층화 무작위 추출법으로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추출하여 표본을 구성하고, 2013년 4월 1일부터 5월 24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한국행정연구원, 2013: 30). 설문응답자의 특성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설문응답자의 특성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전체		1,000명	100%
성별	남성	494명	49.4%
	여성	506명	50.6%
연령	20대	169명	16.9%
	30대	206명	20.6%
	40대	217명	21.7%
	50대	197명	19.7%
	60대 이상	211명	21.1%
지역	서울	209명	20.9%
	인천·경기	290명	29.0%
	대전·충청	101명	10.1%
	광주·전라	102명	10.2%
	부산·울산·경남	161명	16.1%
	대구·경북	106명	10.6%
	강원·제주	31명	3.1%

출처: 한국행정연구원(2013: 31-33) 재구성.

구체적으로 설문응답자들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 분포는 남성이 49.4%, 여성이 50.6%로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20대가 16.9%, 30대가 20.6%, 40대가 21.7%, 50대가 19.7%, 60대 이상이 21.1%로 나타났다. 지역별 분포는 서울이 20.9%, 인천·경기가 29.0%, 대전·충청이 10.1%, 광주·전라가 10.2%, 부산·울산·경남이 16.1%, 대구·경북이 10.6%, 강원·제주가 3.1%로 나타났다.

2. 분석 방법 및 변수 측정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2013년 ‘행정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의 자료에서 총 26

개 문항을 사용한다. 종속변수인 정부 공정성의 분배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3개 문항을, 절차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4개 문항을 사용한다.

정부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국민의 가치관을 살펴보기 위해 계층주의에 대해 2개 문항을, 평등주의에 대해 1개 문항을, 개인주의에 대해 2개 문항을, 체념주의에 대해 1개 문항을 사용한다. 국민 가치관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설문문항들은 당초 한국행정연구원의 연구설계 과정에서 Douglas & Wildavsky의 Grid-Group 문화이론을 상정하고 구성된 것이며, 다수의 문화이론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된 바 있다(Dake, 1990; Dake, 1992; Gastil, 1995; 김서용, 2006).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설문문항의 출처는 아래 <표 3>에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통제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정부 정책으로 받는 혜택의 수준에 대해 2개 문항을, 국가 경제 수준에 대해 1개 문항을, 삶에 대한 만족 수준에 대해 1개 문항을, 정치적 이념 성향에 대해 1개 문항을, 사회에 대한 신뢰에 대해 3개 문항을, 사회 활동 수준에 대해 3개 문항을, 그리고 성별과 연령 각각에 대해 1개 문항씩을 사용한다.

본 연구는 이상의 26개 문항들을 사용해 국민들의 전반적인 인식에 대해 기술 통계를 실시하고,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그리고 통제변수들을 다문항으로 측정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다. 또한 각각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고, 구축된 변수를 바탕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다. 변수별 설문문항 구성을 정리하면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변수별 설문문항 구성

변수		설문문항
정부 공정성	분배 공정성	Q:귀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정부로부터 얼마나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다른 지역주민과 비교해 2) 귀하보다 상위계층과 비교해 3) 귀하보다 하위계층과 비교해 [전혀 공정하지 않다(1)-매우 공정하다(4)]
	절차 공정성	Q:귀하는 현 정부가 정책을 결정할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는 것에 어느 정도 동의 또는 반대하십니까? 1) 정부는 결정을 내리기 전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고려한다. 2) 정부는 신중히 결정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는다. 3) 정부는 좋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정보를 충분히 수집한다. 4) 정부는 편견이 없고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매우 반대(1)-매우 동의(4)]
문화- 가치관	계층주의	Q:귀하는 다음의 각 진술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 또는 반대하십니까? [매우 반대(1)-매우 동의(4)] 1) 우리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은 권위가 무시되기 때문이다. (Dake, 1992; Gastil, 1995; 김서용, 2006) 2) 사회적 지위에 따라 예우가 달라져야 한다. (Dake, 1992; 김서용, 2006)
	평등주의	Q:귀하는 다음의 각 진술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 또는 반대하십니까? [매우 반대(1)-매우 동의(4)] -우리 사회가 평등해지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Dake, 1992)
	개인주의	Q:귀하는 다음의 각 진술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 또는 반대하십니까? [매우 반대(1)-매우 동의(4)] 1) 성공과 실패는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이다. (Dake, 1990; 김서용, 2006) 2) 자유롭게 경쟁해야 사회가 발전한다. (Gastil, 1995; 김서용, 2006)
	체념주의	Q:귀하는 다음의 각 진술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 또는 반대하십니까? [매우 반대(1)-매우 동의(4)] -잘 살고 못 살고는 결국 팔자소관이다. (Dake, 1992; Gastil, 1995; 김서용, 2006)
정부 정책 혜택 수준	Q: 귀하는 현재 정부(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소득, 물가, 고용정책 등)으로부터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받고 있지 않다(1)-매우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4)] Q: 귀하는 현재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연금, 의료보험, 실업보험 등)으로부터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1)-매우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4)]	
국가 경제 수준	Q: 귀하는 요즘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이 얼마나 좋다고 혹은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나쁘다(1)-매우 좋다(5)]	
삶에 대한 만족 수준	Q: 귀하는 현재 삶 전반에 대하여 만족하는 정도를 0과 10점 사이에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완전히 불만족(0)-완전히 만족(10)]	

정치적 이념 성향		Q: 정치 이념을 보수와 진보로 나눈다면 귀하는 자신의 이념적 성향이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극히 보수(0)-극히 진보(10)]
사회적 자본	사회에 대한 신뢰	Q: 귀하는 다음과 같은 각각의 사람들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1) 친척 2) 이웃 3) 처음 만나는 사람 [전혀 신뢰안함(1)-매우 신뢰(4)]
	사회 활동 수준	Q: 다음의 각 단체나 조직과 관련해 가입 및 활동 여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1) 소비자단체 2) 청소년·퇴직자·노인·여성 관련 봉사단체 3) 자선·사회봉사단체 [가입하지 않음(1)-가입해서 활동함(3)]
성별		Q: 귀하의 성별은? 1) 남자 2) 여자 [남자(0)-여자(1)]
연령		Q: 귀하의 연령은 몇 세입니까?

주1: *표시가 된 설문문항은 역코딩을 실시하였음.

주2: 문화·가치관 변수를 구성하는 설문문항의 출처는 괄호 ()로 제시함.

V. 실증분석 결과

1. 기술통계 및 요인분석 결과

본 연구는 국민 가치관과 정부 공정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변수를 구성하는 설문 문항별 기술통계를 살펴보았다. 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분배 공정성의 경우 다른 지역주민과 하위계층과 비교해서는 국민들이 중간 수준보다 다소 높은 수치로 공정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상위계층과 비교해서는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중간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절차 공정성의 경우, 정부가 정책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며, 편견 없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중간 이상의 인식을 보이는 반면에 정부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고려하고 있다는 인식에서는 중간 이하의 값을 보였다.

국민 가치관의 경우, 우리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이 권위가 무시되기 때문이라는 인식은 중간 수준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지만, 사회적 지위에 따라 예우가 달라져야 한다는 인식은 중간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우리 사회가 평등해지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는 인식에서는 중간보다 낮게 나타나 여타 가치관에

비해 평등주의적 가치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성공과 실패는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이라는 인식과 자유롭게 경쟁해야 사회가 발전한다는 인식의 개인주의적 가치관과, 잘 살고 못 살고는 결국 팔자소관이라는 체념주의적 가치관 모두 중간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책과 사회복지정책으로부터 받은 혜택의 수준에 대해서는 중간 이하의 인식을 보였으며, 국가 경제 수준에 대한 인식에서도 부정적인 인식의 값이 나타났다. 삶에 대한 만족 수준은 6.180으로 중간보다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정치 이념 성향에서는 중간보다 약간 높은 값을 보인다는 점에서 다소 진보적 인식으로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에 대한 신뢰에서는 친척, 이웃, 처음 만나는 사람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친척과 이웃에 대한 신뢰는 중간 이상의 값을 보였지만, 처음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중간 이하의 신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활동 수준의 경우, 평균적으로 가입만 한 상태에서 활동은 하지 않는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배경을 살펴보면, 50.6%가 여성이며, 평균 연령은 45.4세로 나타났다. 설문 문항별 기술통계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4>와 같다.

<표 4> 설문 문항별 기술통계

설문 문항		평균	표준 편차	N
분배 공정성	다른 지역주민과 비교해 정부로부터 받는 공정한 대우 수준	2.671	0.614	1000
	상위계층과 비교해 정부로부터 받는 공정한 대우 수준	2.231	0.735	1000
	하위계층과 비교해 정부로부터 받는 공정한 대우 수준	2.580	0.666	1000
절차 공정성	정부는 결정을 내리기 전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고려함	2.463	0.748	1000
	정부는 신중히 결정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가짐	2.551	0.880	1000
	정부는 좋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정보를 충분히 수집함	2.634	0.869	1000
계층주의	정부는 편견이 없고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음	2.572	0.847	1000
	우리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은 권위가 무시되기 때문임	2.543	0.788	1000
	사회적 지위에 따라 예우가 달라져야 함	2.176	0.854	1000
평등주의	우리 사회가 평등해지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임	2.280	0.727	1000
개인주의	성공과 실패는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임	2.724	0.755	1000
	자유롭게 경쟁해야 사회가 발전함	2.870	0.823	1000

체념주의	잘 살고 못 살고는 결국 팔자소관임	2.780	0.860	1000
정부정책 혜택	현재 정부의 경제정책으로부터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1.937	0.701	1000
	현재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으로부터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2.018	0.766	1000
국가경제	요즘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이 얼마나 좋다고 혹은 나쁘다고 생각하는가?	2.157	0.780	1000
삶 만족	현재 삶 전반에 대하여 만족하는 정도	6.180	1.517	1000
정치이념	자신의 정치 이념적 성향	5.130	1.653	1000
사회신뢰	친척에 대한 신뢰	3.040	0.692	1000
	이웃에 대한 신뢰	2.560	0.691	1000
	처음 만나는 사람에 대한 신뢰	1.850	0.669	1000
사회활동	소비자단체에의 가입 및 활동 여부	1.020	0.175	1000
	청소년·퇴직자·노인·여성 관련 봉사단체에의 가입 및 활동 여부	1.080	0.361	1000
	자선·사회봉사단체에의 가입 및 활동 여부	1.110	0.426	1000
성별	남성(0) / 여성(1)	0.506	0.500	1000
연령		45.400	13.695	1000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다수의 상호 관련된 설문 문항들을 공통요인으로 분류하여 단일 차원의 변수를 구성하고 측정의 오류를 줄여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남궁근, 2009: 364). 주성분분석을 이용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개념의 타당성 기준으로 고유값(eigenvalue)은 1 이상, 각 변수의 요인 적재량(factor loading)의 기준 값은 0.6 이상을 설정하고 유의성을 판단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모든 변수의 설문문항들이 타당성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게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문항들 간의 내적 일관성을 평가하기 위해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여 Cronbach α 계수를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Cronbach α 값이 0.5 이상이 되어야 신뢰할 수 있다고 보는데(김석우, 2010: 154; 김호균, 2007: 180; 정무권·한상일, 2008: 111-112),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구성한 변수들의 Cronbach α 계수가 모두 0.5 이상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에서 설정한 설문문항들이 신뢰도의 기준을 충족시키므로 내적 일관성을 갖춘다고 볼 수 있다. 변수별 요인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변수별 요인분석 결과

변수	설문 문항	요인적재량	고유값	분산비율
분배 공정성 (0.654)	다른 지역주민과 비교한 공정한 대우 수준	0.766	1.780	59.322
	상위계층과 비교한 공정한 대우 수준	0.766		
	하위계층과 비교한 공정한 대우 수준	0.779		
절차 공정성 (0.822)	정부는 결정을 내리기 전 사람들의 의견 고려함	0.740	2.613	65.329
	정부는 신중히 결정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가짐	0.787		
	정부는 좋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정보를 수집함	0.848		
	정부는 편견이 없고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음	0.853		
계층주의 (0.519)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은 권위가 무시되기 때문임	0.822	1.352	67.582
	사회적 지위에 따라 예우가 달라져야 함	0.822		
개인주의 (0.525)	성공과 실패는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임	0.824	1.358	67.880
	자유롭게 경쟁해야 사회가 발전함	0.824		
정책혜택 (0.697)	현 정부의 경제정책으로부터 얼마나 혜택받는가	0.877	1.537	76.865
	현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으로부터 얼마나 혜택받는가	0.877		
사회신뢰 (0.667)	친척에 대한 신뢰	0.729	1.809	60.290
	이웃에 대한 신뢰	0.861		
	처음 만나는 사람에 대한 신뢰	0.732		
사회활동 (0.504)	소비자단체에의 가입 및 활동	0.676	1.568	52.250
	봉사단체에의 가입 및 활동	0.748		
	자선·사회봉사단체에의 가입 및 활동	0.742		

주: 괄호 ()는 Cronbach α 계수를 의미함.

2.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는 국민 가치관별로 정부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최 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 OLS)에 의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인 국민 가치관이 종속변수인 정부의 분배 공정 성과 절차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회귀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6>과 같다. 회귀방정식 모형 전체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F 값을 살펴보았을 때 모든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명되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국민 가치관과 정부의 분배 공정성 간의 인과관계 분석 결과를 통제변수까지 모두 포함하여 살펴본 모형 2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는 4가지의 가치관 중에서 계층주의를 제외한 평등주의, 개인주의, 그리고 체념주의가 정부의 분배 공정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강한 국민일수록 정부의 분배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평등주의적 가치관과 체념주의적 가치관이 강한 국민일수록 분배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봤을 때, 평등주의적 가치관보다 체념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국민이 더 분배 공정성 인식에 부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국민 가치관과 정부의 절차 공정성 간의 인과관계 분석 결과를 모형 4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계층주의와 평등주의, 개인주의가 유의확률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높을수록 정부의 절차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고, 그 다음으로 계층주의적 가치관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평등주의적 가치관이 높은 국민일수록 절차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가치관별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계층주의적 가치관 정도가 높을수록 정부의 정책 과정에서의 공정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계층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부분보다는 전체를, 개인보다는 집단을 중요시하며 집단 내 분업과 분화된 역할을 정당화하고 절차의 준수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박종민·김영철, 2001). 즉, 계층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국민은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따르는 절차가 이미 공정하게 구축되어 있다고 인식하기에 절차 공정성을 높게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국민의 평등주의적 가치관 정도가 높을수록 분배 공정성과 절차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대한 영향은 모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등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신분이나 계층의 규정으로 나타나는 불평등을 우려하며 권위를 불평등의 형태로 보고 거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평등주의적 가치관이 높으면 정부의 착취적, 강압적 제도나 체제에 대해 불신의 시각을 가지며 결과에서의 평등이 공정성을 나타낸다고 믿는다(박종민·김영철, 2001). 이에 평

등주의적 가치관이 정부 공정성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개인주의적 가치관은 분배 공정성과 절차 공정성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평등주의에서처럼 결과의 동등보다 기회의 동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다른 준거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공정성을 인식하는데 긍정적 입장을 취할 수 있다. 또한 사회의 제도화된 규범 및 질서에 구속받지 않고, 실패를 제도의 탓으로 보기보다는 개인의 역량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공정성을 인식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분석 결과, 다른 가치관에 비해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절차 공정성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체념주의적 가치관이 높을수록 정부의 분배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념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집단 소속감이 떨어져 정부로부터 받는 대우에 대해 단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공정성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 불신하는 것이 특징이다(박종민·김영철, 2001). 이러한 사유로 체념주의적 가치관이 높을수록 다른 준거집단과 비교해 정부로부터 받는 대우가 불공정하다고 인식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체념주의적 가치관이 평등주의적 가치관에 비해 분배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체념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 대한 소속감이 떨어지고 사회에 대한 불신의 정도가 높다는 점에서 공정성 자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김서용, 2006).

한편, 본 연구에서 설정한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사회 활동 수준과 연령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이 분배 공정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절차 공정성에 대해서는 정치적 이념 성향 변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의 삶에 대한 만족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정부 정책으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고 인식할수록, 그리고 국가의 경제사정이 좋다고 인식할수록 여타 준거집단과 비교해 정부로부터 받는 대우가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분배 공정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의 진보적 정치적 이념 성향 변수의 경우 분배 공정성과 절차 공정성을 인식하는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보수 성향의 보수당 지지자가 정책에 대해 불신하는 경향이 있다는 기타 연구 결과(김상돈, 2009)와 상반된다.

<표 6> 국민 가치관이 정부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변수	정부 공정성			
	분배 공정성		절차 공정성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계층주의	-0.033 (-0.033)	-0.050 (-0.050)	0.132 (0.132)***	0.118 (0.118)***
평등주의	-0.073 (-0.053)	-0.077 (-0.056)*	-0.222 (-0.162)***	-0.228 (-0.166)***
개인주의	0.087 (0.087)***	0.072 (0.072)**	0.141 (0.141)***	0.127 (0.127)***
체념주의	-0.153 (-0.131)***	-0.132 (-0.113)***	-0.021 (-0.018)	-0.001 (-0.001)
정부 정책 혜택 수준	-	0.105 (0.105)***	-	-0.038 (-0.038)
국가 경제 수준	-	0.077 (0.060)*	-	0.065 (0.051)
삶에 대한 만족 수준	-	0.088 (0.133)***	-	-0.014 (-0.021)
정치적 이념 성향 (진보)	-	-0.061 (-0.100)***	-	-0.067 (-0.110)***
사회에 대한 신뢰	-	0.115 (0.115)***	-	-0.017 (-0.017)
사회 활동 수준	-	-0.009 (-0.009)	-	0.031 (0.031)
성별 (여성)	-	-0.109 (-0.055)*	-	-0.038 (-0.019)
연령	-	0.000 (-0.002)	-	0.003 (0.048)
상수	0.592***	0.209	0.565***	0.674***
R ²)	0.035	0.102	0.096	0.117
수정된 R ²	0.031	0.091	0.092	0.106
F	9.030***	9.377***	26.344***	10.877***
N	1000	1000	1000	1000

주1: *p<0.1, **p<0.05, ***p<0.01 수준에서 유의함.

주2: 괄호 ()는 표준화계수 β 값을 의미함.

다음으로, 본 연구의 회귀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 간에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다중공선성을 탐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독립변수들 간 상관관계 조사, 분산팽창요인(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 조건지수(Condition Index: CI), 보조회귀분석(auxiliary regression) 등이 있는데, 하나의 방법으로만 다중공선성 정도를 탐지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위의 방법 중 두세 가지 방법을 겸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은국·노승용, 20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변수들 간 상관관계와 VIF 값을 살펴보았다. 우선,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변수 간에 다중공선성이 나타나지 않았다³⁾.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VIF 값을 살펴본 결과는 아래 <표 7>과 같다. 일반적으로 VIF 값이 10 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Kutner, Nachtsheim, & Neter, 2004). 따라서 적합한 모형이라면 모든 변수들의 VIF 값 및 평균값이 10 이하의 값을 가지게 된다. 아래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의 VIF 값이 10 이하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설정한 회귀모형들이 모두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2) 독립변수에 의한 종속변수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결정계수 R^2 값이 0.035(3.5%)부터 0.117(11.7%)의 범위로 나타나 모형의 설명력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와 같이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한 연구들에서 R^2 값이 대체로 높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박희봉·이희창·조연상(2003)의 연구에서는 수정된 R^2 값이 0.051로, 정광호·이달곤·하혜수(2011)의 연구에서는 R^2 값이 0.17로, 오경민·박홍식(2002)의 연구에서는 수정된 R^2 값이 0.054로, 서성아(2013)의 연구에서 수정된 R^2 값이 0.158로 나타났다.

3) 일반적으로 “다중공선성은 두 개의 독립변수 간 상관계수 절댓값이 0.7을 초과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이은국·노승용, 2010: 390).

<표 7>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변수	VIF	VIF
계층주의	1.146	1.198
평등주의	1.135	1.168
개인주의	1.122	1.172
체념주의	1.156	1.252
정부 정책 혜택 수준	-	1.124
국가 경제 수준	-	1.194
삶에 대한 만족 수준	-	1.075
정치적 이념 성향 (진보)	-	1.121
사회에 대한 신뢰	-	1.070
사회 활동 수준	-	1.013
성별 (여성)	-	1.025
연령	-	1.145

VI.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정부 공정성을 인식하는데 있어 국민 가치관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Douglas & Wildavsky의 Grid Group 문화이론에 따라 국민 가치관을 개념적으로 체계화하고 우리나라 국민의 인식을 중심으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정부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기술통계로 살펴본 결과, 응답자들이 지역 주민과 하위계층과 비교해서는 분배 공정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상위계층과 비교해서는 중간 이하의 인식을 보이면서 분배 공정성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최근 아세아문제연구소와 동아시아연구원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난 한국의 상위계층에 대한 상당한 불신과 유사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강원택·이내영, 2011). 한편, 절차 공정성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중간 이상의 응답을 보였다는 점에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이 나타났다. 즉, 국민이 인식하기에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이 대체로 공정하고 정당하게 구축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

로, 국민 가치관과 관련된 문항들을 살펴보면, 계층주의와 평등주의적 가치관의 평균값이 중간 이하로 나타난 반면, 개인주의와 체념주의 가치관의 평균값은 중간 이상으로 나타난 점은 특기할 만하다. 이는 한국 사회에 대체로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자유주의적 시각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는 한편, 강한 사회적 규범 하에서 한 번 일탈하게 되면 더 이상의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체념하는 경향이 다소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한국 사회의 계층구조가 고착되어 있어 사회적 유동성 및 계층상승이 어렵다는 여론조사 결과와도 연계된다고 볼 수 있다(강원택·이내영, 2011).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분배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개인주의는 긍정적인 영향을, 평등주의와 체념주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절차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계층주의와 개인주의는 긍정적인 영향을, 평등주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국민의 가치관이 공정성 정도를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Leventhal, 1976; Leung & Bond, 1984; Fisek, Norman, & Wagner, 1986; Leung & Lind, 1986; Field, Pang, & Chiu, 2000; 서인석·윤우제·권기현, 2011). 한편, 통제변수들 중에서는 정부 정책 혜택 수준과 국가 경제 수준, 삶에 대한 만족 수준, 정치적 이념 성향, 사회에 대한 신뢰, 그리고 성별이 분배 공정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절차 공정성에 대해서는 정치적 이념 성향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공정사회를 강조하는 최근의 기조에 따라 많은 관심을 받게 된 정부 공정성에 대해 전국적 범위에서 국민의 인식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실증 분석을 통해 정부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가치관별 인식의 차이를 밝혔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또한 공정성을 인식하는데 있어 개인의 문화적 배경이 주요 영향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기존 선행연구의 결과가 제시되어 왔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각 가치관의 특성이 공정성을 인식하는데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Douglas & Wildavsky의 Grid Group 문화이론에 따라 체계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국민의 가치관에 따라 정부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는 점에서, 최근 공정사회를 표방하며 정부 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정부의 노력에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동안 정부에서 정책을 통해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부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국민의 가치관에 따라 정부 공정성과 정책 및 정부 서비스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여 국민의 정부에 대한 만족도를 제한하였다는 점에서 정부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정부가 국민 가치관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개별 가치관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설계할 때, 국민의 정부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보다 용이하고 적실성 있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 강원택·이내영 (공편). 2011.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 여론조사를 통해 본 한국인의 정체성》. (재)동아시아연구원.
- 금현섭·백승주. 2010. “정치적 이념, 정부신뢰 그리고 정책지지.” 《행정논총》 48(4): 201-228.
- 김상돈. 2009. “사회경제적 지위와 정치적 성향이 국가기관 불신에 미치는 영향: 정부정책 불신의 매개효과.” 《한국사회학》 43(2): 25-54.
- 김서용. 2006. “정책과정에서 전문가의 중립성에 대한 실증분석: 문화이론과 Q방법론의 적용을 통해.” 《한국행정학보》 40(4): 127-153.
- 김석우. 2010. 《SPSS, AMOS 활용의 실제》. 학지사.
- 김은희·박희서. 2007.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공정성 지각이 친정부적 자발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보》 41(4): 261-285.
- 김호균. 2007. “조직공정성인식, 조직신뢰, 조직시민행동 간 영향관계분석.” 《한국행정학보》 41(2): 69-94.
- 김호균·김정인. 2013. “미국 NPO 조직에서의 조직공정성,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간 관계 고찰: 교차수준 분석 (cross-level study)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7(2):

161-187.

김호섭 외. 2007. 《조직 행태의 이해》. 대영문화사.

남궁근. 2009. 《행정조사방법론》. 법문사.

《매일경제》. “세계 정상 신년사, 부패척결 시진핑 공정사회 만들자.” 2014년 1월 1일.

박종민·김영철. 2001. “한국의 행정문화 재고: 문화이론을 지향하며.” 《한국행정학회 하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445-460.

박종민·배정현. 2007. “정부신뢰와 정책혜택 및 정부공정성에 대한 태도.”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1-17.

박종민·배정현. 2011. “정부신뢰의 원인: 정책결과, 과정 및 산출.” 《정부학연구》 17(2): 117-143.

박희봉·이희창·조연상. 2003. “우리나라 정부신뢰 특성 및 영향 요인 분석.” 《한국행정학보》 37(3): 45-66.

백승주·금현섭. 2013. “불평등의 다차원적 접근 -측정 및 활용-.” 《한국정책학회보》 22(2): 283-312.

서성아. 2013. “행정서비스만족이 정부지지에 미치는 영향의 한계.” 《한국행정학보》 47(1): 47-67.

서인석·윤우제·권기현. 2011. “정부조직의 조직문화와 조직공정성, 조직시민행동의 인과구조 -조직신뢰의 매개효과를 포함하여-.” 《한국정책학회보》 20(3): 395-427.

석현호 (편). 1997.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공정성》. 나남출판.

석현호 외. 2005.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공정성 의식의 변화》.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신황용·이희선. 2013. “조직공정성과 조직몰입 및 혁신적 업무행동 간의 구조적 인과관계 분석.” 《한국행정학보》 47(3): 157-179.

오경민·박홍식. 2002. “정부신뢰 수준의 측정과 비교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11(3): 113-130.

오수길·채종현. 2003. “한국 중앙행정기구의 문화유형 비교분석: grid-group 문화이론의 적용.”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4(3): 45-68.

윤상우·김상돈. 2010. “사회적 가치관이 한국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36(1): 91-117.

윤정구·임준철. 1998. “공정성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 사기업과 공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2(3): 55-72.

이승중. 2010. “정부신뢰에 대한 종교의 영향.” 《한국행정학보》 44(1): 99-119.

- 이은국·노승용. 2010. 《사회과학통계입문》. 다산출판사.
- 이종수. 2011. “지역사회 내의 공정성 제고와 지방정부의 역할.” 《지방행정연구》 25(1): 15-34.
- 전영평. 2001. “여성차별과 여성정책의 문화이론적 해석.” 《한국행정논집》 13(4): 1047-1067.
- 정광호·이달곤·하혜수. 2011. “지방정부 신뢰요인의 탐색.” 《한국행정학보》 45(4): 181-201.
- 정무권·한상일. 2008. “한국 중앙정부의 학습조직 구조로서 인프라, 시스템, 문화의 상호관계: 구조방정식을 통한 효능감과 만족감에 대한 효과 분석.” 《한국행정학보》 42(1): 97-122.
- 정용덕. 2011. “공정성과 정책이론.”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1-8.
- 조국행. 2007. 《공정성과 조직몰입, 직무만족, 조직유효성》. 한국학술정보.
- 주재현. 2011. “한국 행정문화의 지속과 변화에 관한 연구: Grid-Group 문화이론의 적용.” 《정부학연구》 17(1): 1-34.
- 천대윤. 2011. “공정사회와 정책방향: 롤스(John Rawls)의 공정성 사상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323-333.
- 한국행정연구원. 2013. 《행정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
- Adams, J. Stacy. 1965. “Inequity in Social Exchange.” *Advance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 267-299.
- Bentham, Jeremy. 1789. *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 Oxford: Clarendon Press.
- Cho, Yoon Jik & Na Sai. 2013. “Does Organizational Justice Matter in the Federal Workplace?” *Review of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33(3): 227-251.
- Cohen-Charash, Y., & P. Spector. 2001. “The Role of Justice on Organizations: A Meta-analysi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86: 278-321.
- Dake, K. 1990. “Technology on Trial: Orientating Dispositions Toward Environmental and Health Hazards.” *Ph.D. Dissertation at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 Dake, K. 1992. “Myths of Nature: Culture and the Social Construction of Risk.” *Journal of Social Issues* 48(4): 21-37.
- Douglas, M. & A. Wildavsky. 1982. *Risk and Culture: An Essay on the Selection of Technological and Environmental Dangers*.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Ewing, A. C. 1948. "Utilitarianism." *Ethics* 58(2): 100-111.
- Field, D., M. Pang, & C. Chiu. 2000. "Distributive and Procedural Justice and Predictors of Employee Outcome in Hong Kong."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1: 547-562.
- Fiske, H., R. G. Norman, & D. G. Wagner. 1986. "The Formation of Reward Expectations in Status Situations." In D. M. Messick, & K. S. Cook, eds. *Equity Theory: Toward a General Theory of Social Interaction*, New York: Praeger.
- Furby, L. 1986. "Psychology and Justice." In R. N. Cohen, ed. *Justice: Views from Social Sciences*, New York: Plenum.
- Gastil, J. 1995. *Analysis of Cultural Type Survey Items*. Memo.
- Greenberg, Jerald. 1987. "Reactions to Procedural Injustice in Payment Distributions: Do The Means Justify the End?"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2: 55-61.
- Greenberg, Jerald. 1990. "Organizational Justice: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Journal of Management* 16: 399-432.
- Hegvedt, Karen A. 1993. "Approaching Distributive and Procedural Justice: Are Separate Routes Necessary?" *Advances in Group Processes* 10: 195-221.
- Hofstede, G. 1980.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Beverly Hills, CA: Sage.
- Homans, George C. 1961. *Social Behavior: Its Elementary Forms*. New York: Harcourt, Brace and World.
- Kutner, Michael H., Christopher J. Nachtsheim, & John Neter. 2004. *Applied Linear Regression Models* 4th edition, McGraw-Hill Irwin.
- Leung, K. & E. A. Lind. 1986. "Procedural Justice and Culture: Effects of Culture, Gender, and Investigator Status on Procedural Prefer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1134-1140.
- Leung, K. & Michael Bond. 1984. "The Impact of Cultural Collectivism on Reward Allo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 793-804.
- Leventhal, G. S. 1976. "Fairness in Social Relations." In J. W. Thibaut, J. T. Spence, & R. C. Carson, eds. *Contemporary Topics in Social Psychology*, New Jersey: General Learning Process.
- Lind, E. A. & R. Tyler. 1988. *The Social Psychology of Procedural Justice*. New York: Plenum.
- Lock, E. A. & D. Henne. 1986. "Work Motivation Theories." In C. L. Cooper and I.

- Robertson, eds. *International Review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New York: Wiley.
- Mill, John Stuart. 2001. *Utilitarianism* Hackett Publishing Company, Inc.
- Quinn, R. E. & K. S. Cameron. 1983. "Organizational Life Cycles and Shifting Criteria of Effectiveness." *Management Science* 29: 33-51.
- Rawls, John. 1971.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Massachusetts: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Rubin, E. V. 2009. "The Role of Procedural Justice in Public Personnel Management: Empirical Results from the Department of Defense."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9: 125-143.
- Schaubroeck, J., E. R. May, & F. W. Brown. 1994. "Procedural Justice Explanations and Employee Reactions to Economic Hardship: A Field Experimen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9: 455-460.
- Thompson, M., R. Ellis, & A. Wildavsky. 1990. *Cultural Theory*. Boulder, San Francisco: Westview Press.
- Triandis, H. C. 2001. "Individualism-Collectivism and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69(6): 907-924.

[부록]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A	B	C	D	E	F	G	H	I	J	K	L
A	1.000											
B	-.237 ***	1.000										
C	.159 ***	-.269 ***	1.000									
D	-.304 ***	.196 ***	-.234 ***	1.000								
E	.151 ***	.003	-.069 **	-.082 ***	1.000							
F	.137 ***	-.044 *	.007	-.270 ***	.266 ***	1.000						
G	-.065 **	.073 *	-.011	.023	.041 *	.147 ***	1.000					
H	-.085 ***	.048 *	-.147 ***	.103 ***	-.091 ***	-.041 *	.056 **	1.000				
I	.013	-.134 ***	.133 ***	.039	-.023	.028	.131 ***	-.004	1.000			
J	.054 **	-.005	-.014	.027	-.005	.004	-.058 **	.026	-.020	1.000		
K	.020	-.072 **	-.006	-.027	.036	.048 *	.092 ***	-.003	-.021	.042 *	1.000	
L	.149 ***	-.006	.048 *	-.045 *	.156 ***	.117 ***	-.028	-.282 ***	.079 ***	.035	.054 **	1.000

주1: *p<0.1, **p<0.05, ***p<0.01 수준에서 유의함.

주2: A=계층주의, B=평등주의, C=개인주의, D=체념주의, E=정부 정책 혜택 수준, F=국가 경제 수준, G=삶에 대한 만족 수준, H=정치적 이념 성향, I=사회에 대한 신뢰, J=사회 활동 수준, K=성별, L=연령.